

■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제주 미래가치 맞는 담론 우선 설정을”

한라일보·(사)제주와미래연구원 공동기획 토론
“중앙정부 의중 따라 방향성 결정... 성찰 필요”
“미래 100년 내다보는 구상 기초로 법안 마련을”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진정한 '특별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 미래가치에 맞는 담론을 우선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환경 등 제주 고유의 재산을 활용해 새로운 제주형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관련기사 7면

한라일보와 제주와미래연구원은 특별기획으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를 주제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대해 총 11회에 걸쳐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주제에는 인터넷신문 제주의소리도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법 전면개

정 과정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의 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공론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토론은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난 4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태운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장,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나섰다.

토론회에선 >제주특별법의 성과와 한계 진단 >전면 개정의 필요성

>전면 개정의 방향성 >제주다운 모델 창출 및 시대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방안 등이 다뤄졌다.

특히 기존 특별법이 도민의 뜻에 따라 개발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필요에 의해 제정돼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기간 제주의 핵심 비전으로 여겨졌던 '국제자유도시'의 목표를 개발 위주가 아닌 탄소중립, 공존과 같은 미래가치를 담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송재호 의원은 "기존 특별법 3법은 도민의 바람보다는 중앙의 필요에 의해 방향성이 결정됐다"며 "특별법에 대한 성찰이 있어 이 부분이 집중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철 대표는 "2006년 제정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특별자치도가 결합된 특별법의 내용 중 '규제 완화'라는 말이 나온다. 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지만 결국 외자를 유치해서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집중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법이 코로나19,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등 시대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2000년대 초반까지 개발에 중점을 뒀던 개념에서 벗어나 법안의 내용도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구상을 기초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법 개정에서 방향성을 정립하는 핵심 좌표를 법안의 제목부터 새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원하고 있는 행정체계가 독자적인 행정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하늘분화구 모내기 1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하늘분화구의 논에서 농민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제주도, 307억원 부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0만4954건에 대해 307억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신규·이전 등록된 경우 보유한 기간만큼만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또 오는 23일까지 조기 납부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313명을 선정해 2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 전'을 지급한다.

강다혜기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공방 예고

도의회 정례회 개최... 30일까지 각종 안건 심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부터 30일까지 제396회 정례회를 열어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주목 받는 안건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와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체결동의안' 등을 꼽을 수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1차 회의를 열어 두 안건을 다룬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하 3차 종합계획)은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지난 9일 그 내용이 공개됐다.

제주도는 제3차 종합계획에 따라 제주를 동·서·남·북 4대 권역으로 나

뉘 15개 핵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5개 핵심사업으로는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한 스마트혁신도시와 제주시 신도심에서 공항, 원도심과 공항을 신교통수단인 트램으로 연결하는 사업 등이 제시됐다. 총 사업비는 7조 7600여억원으로 추정됐다.

도의회 행자위는 이번 정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종합계획이 적정함을 검토한다. 제주도는 정례회가 끝나면 오는 22일 제3차 종합계획 도민 공청회를 연 뒤 오는 7월 임시회 때 3차 종합계획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는다.

한 차례 의회 문턱에서 좌절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체결 동의안(이하 상생협력 동의안)은 이번 재심사 때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제395회 임시회 때 상생 협력 동의안 체결 절차와 내용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심사보류했다.

이후 제주도는 상생협력 동의안을 수정해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형사처벌된 강정 주민의 사면 복권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에 적극 건의하는 내용과 강정 주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전문적 치유를 위해 4·3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내용 등을 추가했으며, 도의회 행자위는 최근 강정마을회와의 간담회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이밖에 전국 최다 수준으로 난립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개선 계획과 제주관광공사 경영진단 용역 결과도 이번 회기 때 다뤄진다.

이상민기자

노후 시설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도교육청, 1586억원 투자 스마트교실 조성 등 추진

도내 40년이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 25동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5년간 15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 사업 중 하나로 >미래 변화에 맞는 공간혁신 >간물에너지 절약과 학생건강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그린 학교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ICT 기반 스마트교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시설 복합

화 사업 등으로 추진된다. 특히 학교 설계 과정마다 학생·교직원 등 사용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대수선이 필요한 학교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등 3개교(3동)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이후에는 4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 중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선도학교 등 핵심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대상학교는 경과 연수, 내진보강, 석면 보유 등 최근 시설보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제주 코로나19
 14일 17시 기준 **누적 확진 1197**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

Sustainable Peace, Inclusive Prosperity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아피시 웨라치와
 전 태국 총리

케빈 러드
 전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2016)

아비지트 배너지
 MIT 경제학과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2019)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1

FOR PEACE & PROSPERITY

2021. 06. 24.(목) ~ 26.(토) | 제주 해비치호텔 앤 리조트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소식

주최

주관

후원